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2기 중소기업 가업승계 컨설팅... 7월 한 달 동안 신청접수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기 중소기업 가업승계 컨설팅 신청을 7월 한 달 동안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중소기업,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으로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가업승계 컨설팅은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다.

기업이 자의적으로 자녀 상속증여 플랜을 짰다가 오류를 저지르거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컨설팅 외에도, 안내책자 개편, 리플릿 및 동영상(명문 장수기업의 필수코스 시리즈)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물라서 못 쓰는 가업승계 세제혜택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 측은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최대한 제공하는 가업승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 여부는 오는 8월 31일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대구 중리동 공장화재 피해 납세자 납기 연장

지난 15일 대구 서구 중리동 공장화재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국세청이 나섰다.

당면한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 세금 때문에 불가피한 압류매각 조치도 유예하는 한편 세무조사 대상일 경우 '일단 멈춤, 다각도로 세정 지원키로 한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16일 "이번 화재로 건물 기계장치재해 등이 불에 타거나 훼손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예 착수를 금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는 피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중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처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최은호 대구국세청 징세과장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5년간 276건 자체시정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지방청,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청구건 588건 가운데 182건을 시정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원 이상 납세자에 대한 조사담당자의 조사기간 연장·범위 확대 신청 3584건 중 조사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645건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거나 일부만 승인했다.

또한,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도 2033건 중 1036건을 수용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민간위원 주도의 심의기구로 국세청 본청과 전국 지방청(7개) 및 세무서(133개)에 각각 하나씩 설치돼 있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 개선 사안의 경우 권고형식을 통해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도 이행 중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일반 국세행정 10개 전 분야의 권리보호요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장부 등 일시보관 기간연장 승인 시 납세자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